

해수부 **어항공사 상반기 모두 발주** 56개항, 57건-1천559억원

1천 500억원대에 달하는 어항건설 공사가 모두 상반기내에 조기 발주된다.

해양수산부는 56개항, 57건, 1천559억원에 달하는 올해 어항건설공사를 모두 상반기 중에 발주하는 내용의 '2004년도 어항건설공사 조기발주 계획안'을 마련, 집행할 계획이다.

기간별로는 1·4분기에 전체 공사예산의 77%에 달하는 36건 1천207억원의 공사를 집행하고 2·4분기 중 나머지 21건 352억원대 공사를 추가 발주하기로 했다.

지방청별로는 목포청과 여수청이 10건씩 274억원과 267억원대 어항공사를 발주하며 포항청(9건 256억원), 마산청(8건 186억원), 동해청(4건 125억원), 인천청(2건 65억원), 군산청(2건 39억원) 등이며 울산청과 부산청도 각 1건씩 80억원과 23

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사업성격별로는 계속사업이 29개항 29건으로 1천4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이중 신규투자항은 마산 대포항과 호두항, 목포 우이도항 등 3건으로 30억원이 배정됐다.

유지보수사업으로 27개항 28건 사업에 514억원이 할당됐는데 해양수산부는 태풍진로권 어항과 상반기 주요공정의 마무리가 필요한 외곽시설 추진사업 대상항 등 규모가 큰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절대소요 공사기간의 충분한 확보와 효율적 공정관리를 통해 이월 발생분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특히 태풍기 이전 주요공정을 조기 마무리함으로써 시공중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로 했다.

어항시설 수익권 거래 허용

어촌·어항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어항부지내 시설물 사용수익권의 물권화를 허용하는 등 어항 민자 촉진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있다.

해양수산부는 작년말 발표한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내 포함된 2.6조원대의 세부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해선 건설업체 등 민간 참여가 필수적이라 판단아래 이같은 방향의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작업을 연내 마무리지를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어항 및 어촌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를 촉진키 위해 어항 및 부지의 사용수익권에 대해 물권화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국가귀속시설인 어항 및 어항부지내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물권 활용이 가능해지면 수익권 이전을 통해 투자비를 조기 회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투자자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게 해양수산부측 설명이다.

일본 '04 수산예산 2,837억500만엔 전년도 대비 0.43% 감소

일 본수산청은 구랍 24일 2004년도 수산예산의 개요를 발표했다.

2004년도 수산예산은 2,837억500만엔(전년대비 95.7%), 내역으로는 비공공 827억1,000만엔(전년대비 98.8%), 공공은 1,909억9,500만엔(전년대비 94.3%)였다.

중요한 항목으로는 과학적 자원관리에 258억9,400만엔(전년 242억9,600만엔)으로 일본 주변수역 자원조사 추진대책에 20억엔, 자원복원 추진지원사업(감선, 휴어에 대한 지원)에 19억9,600만엔(신규), 어업경영 구조개선사업 중 자원회복계획추진 지원시설정비사업에 7억8,000만엔(〃), 수산자원증식브랜드 일본추진대책사업 중 자원회복계획촉진형에 1억7,000만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안역에서 풍요로운 환경조성에는

269억5,800만엔(260억800만엔)-신규로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배려한 거머리말 조장 조성 기술개발조사사업비 9,000만엔, 긴급 백화현상 대책모델사업에 1억5,000만엔, 증양식기능 등 실증조사사업에 1억600만엔이 포함되었다.

기타 기르는 어업의 추진에 26억6,500만엔(21억8,000만엔), 어선의 입수나 자금원 조달 등의 원활화에 14억7,000만엔(18억5,400만엔), 수산기술의 혁신에 10억4,700만엔(1억400만엔), 소비자의 원하는 수산물의 생산·공급에 519억3200만엔(456억7100만엔), 풍요롭고 활력있는 해변 조성에 235억1,800만엔(238억8700만엔) 효율적·중점적인 수산기반의 정비에 1,792억2,500만엔(1894억9900만엔)등이 포함되었다.

25개 권역 어촌종합 개발 총 504억 투입

어촌의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중 전국 25개 권역에 504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5개 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 계획에 착수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내용의 권역별 사업비 배정계획을 확정, 집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국고 272억원, 지방비 270억원, 자부담 25억원 등을 전국 25개 지역에 배정해 해당 권역별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주요사업은 선착장 등 어선계류시설, 어장진입로 등 해안시설, 공동작업장 및 냉동저장시설 등 수산시설, 간이위판장 등 유통시설, 해안소공원 등 관광기반시설, 복지회관 등 복지시설 등의 건립이다.

광고문의 02-3673-2854